

I . 2024년 재정 여건과 전망

1. 2024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

1 세입여건

- (자체수입)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자체수입 여건이 어려운 환경 예상, 정밀한 세입여건 분석에 따라 예산편성 필요
 - (지방세)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정체 및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·지방소비세 저조 등 지방세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
 - 안정적인 예산 운용 및 세입-세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밀한 세입 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·합리적인 예산편성 필요
 - (세외수입)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,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분석·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
-
- (이전수입)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 우려
 - 중·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라 국세 및 이와 연동되는 교부세·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완만한 증가세 예상
 - 다만, 최근(23년 상반기) 자산시장 둔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저조함에 따라, 단기적으로는 이전재원 감소 우려 존재

- (지역경제) 지출 감소·증가요인 상존,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필요
 - 코로나19 위기 완화 등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백신·방역 비용, 재난 지원금 지급 등 한시지출 요인은 감소
 - 다만 저출산·고령화 및 지방 인구소멸 가속화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증가요인 악화
 - 한편 지역경제 회복,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 및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지출 소요도 증가 전망
 - (인구구조 변화 대응) 저출산 대응 및 노령인구 대상 복지 강화와 함께,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지원 확대
 - (지역경제 회복)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, 고물가·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재정 역할 필요
 - (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) 기업 지방이전 지원, 모빌리티·바이오 등 첨단분야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등 지역 경쟁력 강화
 - (국정과제 이행) 맞춤형 서비스 복지로의 전환 등 과제 이행에 따라 복지·교육재정 수요 증가 예상
- ⇒ 위와 같은 여러 지출 증가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 기조에 발맞추어 기존 지출구조 혁신 등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필요

□ (세계경제)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가운데 성장세는 점차 개선

- OECD와 세계은행(WB)은 '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각각 2.7%, 2.1%로 기존 전망 대비 0.15%p, 0.4%p 상향 조정(OECD·WB, '23.6.6.~6.7.)
- 에너지가격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, 기업·소비심리 반등과 함께 중국 리오프닝 등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히 개선 예상(OECD, '23.6.7)
- ※ OECD 평균 물가상승률 전망(%) : ('22) 7.8 → ('23) 6.1 → ('24) 4.7

□ (국내경제) 하반기 이후 경기여건 개선 예상, 다만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전망

- 국내경제는 ('23년) 1.4%에 이어 ('24년) 2.3%, 성장할 것으로 전망, 기존 전망치 대비 각각 $\Delta 0.2\%p$, $\Delta 0.1\%p$ 하향 조정(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'23.6.30.)
- ※ '23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(%) : (IMF('23.4.)) 1.5, (OECD('23.6.)) 1.5, (한은('23.6.)) 1.4
- 하반기 이후 소비 회복세 지속 및 IT 경기 완화 등 수출 개선에 따라 경기 부진 완화가 예상되나,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더딜 전망
- 소비자물가는 '23년 중반까지는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뚜렷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으나, 그 이후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

〈한국경제 주요 지표 전망(% , 6.30. 기준)〉

	'22년	'23년	'24년
경제성장률	2.6	1.4	2.3
민간소비	4.3	2.3	2.4
재화수출	3.4	0.4	3.3
소비자물가	5.1	3.5	2.4

2. 2024년도 지방재정운용 방향

1

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

(목표) 건전한 지방재정, 성장하는 지역경제

(기본방향)

- ① 불필요한 보조금 선심성 사업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기초 확립
- ② 지역경제 활력 제고+사회적 약자·취약계층 보호 등 약자복지는 강화
- ③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

(과제1)
지방재정 건전성 제고

- 1-①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방안
- 1-②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 방안
- 1-③ 객관적 합리적인 재정운용
- 1-④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
- 1-⑤ 지방세입 확충 노력 강화

(과제2)
지역경제 활력 회복

- 2-①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
- 2-②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
- 2-③ 민생경제 안정 지원

(과제3)
지역사회 안전망 강화

- 3-① 약자복지·취약계층 보호
- 3-② 저출산·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
- 3-③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활성화

(과제4)
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

- 4-① 지역인재 육성 기반 마련
- 4-② 지역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제고
- 4-③ 지역 신성장 산업 발굴 지원
- 4-④ 생활SOC 등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

3. 우리군 재정여건과 방향

1 재정여건

- 정부의 세입여건 악화로 지방교부세 감소 및 경기회복 속도도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, 고금리·고물가에 따른 경기회복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긴축재정 기조 유지
- (자체수입)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
- (의존재원) 정부의 세입여건 악화로 지방교부세, 국·도비보조사업, 특별조정교부금, 인구소멸대응기금 등 이전재원의 큰 폭 감소 예상

2 세출전망

-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현안사업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 및 국·도비보조사업 등 이전재원의 감소로 인한 군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
- (지역경제 활성화) 코로나 및 엑스포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원 마련
 - 지역특산물 온라인 판로 확보 지원 및 마케팅 강화
 - 소비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
- (복지분야) 취약계층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심한 배려
 -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재원 확충
 -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취약계층의 적극적인 보호
- (생활안전) 각종 재해·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
 -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예방사업 등 체계적인 관리

□ **긴축재정 기초 유지를 위한 예산관리 강화**

- 연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반영하되,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출구조 조정 추진
- 불필요한 관행적·선심성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를 통한 관리 강화

□ **취약계층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심한 배려**

- **(취약계층 보호)**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적극적인 보호
 -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고령층의 사회참여 기회 부여
 - 문해교육 및 평생학습 지원 등을 통한 교류기회 확대
 - 양육, 아동, 청소년, 신혼·출산가구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자원 확보 추진

□ **각종 재해·재난 사전 예방을 위한 취약지 관리 강화**

- **(생활안전)** 각종 재해·재난 사전예방 등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
- 극한호우 등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한 취약 기반시설 정비

□ **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·지원**

- **(농업의 다변화 추진)** 원예·축산·경종농업의 새로운 소득분야 발굴 및 노동력 해소를 위한 스마트 농업화 추진
- **(청년 후계농 육성)** 청년농·농업법인 육성 지원을 통해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청년 일자리 창출, 인구유입 효과 기대
-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 보육·교육·의료·주거·문화 등 지역생활 인프라 개선 추진(* **인구감소지역(89개), 관심지역(18개)를 중심으로 10년간 매년 1조 지원**)